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요인과
세계 정세 전망

7, 8면

울산플랜트건설
전면 파업

6면

조선업 노동자들은
위기에 책임 없다

6면

다음 호(186호)는 11월 19일에 맞춰 발행
됩니다.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박근혜 퇴진 운동
에 발맞추고자 당분간 <노동자 연대>를
주간 발행합니다.

〈조선일보〉의 거짓 보도

누가 ‘기레기’ 언론 아니랄까 봐

11월 5일 대규모 전국 시위가 있고 나서 〈조선일보〉는 ‘웬 혁명? … 촛불 집회서 외면당한 좌파들’이라는 제호의 기사를 내보냈다.

언론의 기본이 안 된 기사다. 사실관계부터가 엉망이다. 문제 삼은 발언자 신상조차 완전히 틀려서 〈조선일보〉는 정정 보도까지 했다. 이뿐이 아니다. 이 기사는 노동자연대·사회진보연대·환수복지당 등 단체들이 “혁명정권 이뤄내자”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유인물을 배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 ‘노동자 민중이 권력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외면당했다고 주장한다.

〈조선일보〉는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앞서 인용한 단체나 그 주장을 모를 것이라고 보고 자의적으로 기사를 쓴 것이다. ‘악마의 편집’, ‘단장취의’(문장을 잘라 인용해 원작자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의도를 취하는 것) 같은 아주 비윤리적 보도 방식이다.

〈조선일보〉는 이 운동에 참가한 상당수가 운동의 경험이 적다는 점을 이용해 얼토당토않은 거짓 선동으로 운동 참가자들이 좌파에 경계심을 갖도록 만들려 하는 듯하다. 이 운동에 좌파들이 포함돼 있음을 부각해 색깔론을 퍼 운동 내 오른쪽을 단속하는 효과도 노렸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좌파들이 대중의 정서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초기에 이번 운동을 건설한 것이 운동의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구실을 했다. 10월 29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광범한 분노를 결집시키는 주말 집회를

“쓰레기는 쓰레기 신문 만드는 곳으로” 2008년 6월 10일 ‘100만 촛불대행진’ 당시 많은 사람들이 거리의 쓰레기를 수거해 〈조선일보〉현관에 버렸다.

개최한 것이 이 운동의 도약대가 됐다.

한편, 〈조선일보〉는 박근혜 퇴진 촉구 집회에서 “노동개악 철폐하라”는 구호가 나온 것도 문제 삼는다.

비도덕적

그러나 특히 집회 자유 발언들을 들어 보면, 지금 박근혜 퇴진 운동의 바탕에는 경제 위기와 박근혜가 추진한 경제 정책에 따른 불평등 확대 그리

고 민주적 권리 침해 등으로 켜켜이 쌓여 온 불만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총체적 불만이 거대한 부패·비리 스캔들과 만나 퇴진 운동으로 급격히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경험 적은 참가자들은 “노동개악 철폐”가 박근혜 퇴진 운동을 분산시킨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조선일보〉는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 노동자 운동과 더 넓은 대중 사이를 벌리려고 하는

것이다. 우익이자 기업주 언론답게 박근혜 퇴진 운동을 약화시키려는 계급의식적인 목적을 갖고, 그러나 매우 비도덕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박근혜 퇴진은 관창고(?) 다른 요구들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당참기나 할까? 2008년 촛불이 타올랐을 때 〈조선일보〉는 배후세력, 순수성 운운하며 반정부 구호를 문제 삼았다. 그래서 “찌라시”라고 욕

을 먹었다. 그런데 이제는 퇴진만 외쳐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조선일보〉가 뺏속까지 엘리트주의에 젖어 있고 대중의 자체 행동을 혐오한다는 것은 최근의 경험으로도 너무 명백하니 광주항쟁 등 위대한 대중투쟁들을 폄하했던 추악한 과거는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김지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중고등학교 ☐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3천 원 이상)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5만 원 이상 () 원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olidarity.org



박근혜는 자신의 치부를 들춰내는 손석희를 눈엣가시로 여긴다.

어버이연합은 손석희 고발을 취하하라

극우 반공주의 단체 어버이연합이 손석희 JTBC 사장을 고발했다. JTBC 〈뉴스룸〉이 ‘최순실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다. 어버이연합은 손석희 사장이 “사건의 원흉”이라며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 전 민정수석 우병우의 구속 수사 촉구 농성을 하는 더민주당의 농성장에도 난입했다.

세간에 JTBC 8시 〈뉴스룸〉이 현 정국에서 제1야당 구실을 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JTBC 보도국은 박근혜·최순실의 부패를 살살이 발라내

고 있다. 청와대가 분을 참지 못하고 JTBC를 갈아 마시고 싶어 할 것임은 안 봐도 비디오다.

그래서 어버이연합이 손석희 사장을 고발한 것은 청와대 발(發) 역공의 신호탄일 수 있다. 청와대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에 각종 집회를 지시하고 전경력이 이 단체에 불법 자금을 지원한 의혹이 제기된 것에서 보듯이, 어버이연합은 청와대의 행동대다.

어버이연합의 행동 개시는 박근혜의 완강한 퇴진 거부 의사를 떠받치는 것

이다. 또, 박근혜 퇴진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더한층 격렬해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버이연합의 손석희 사장 고발은 간과할 일이 아니다. 10월 말에 분출한 대중 운동에 지금껏 밀리던 박근혜 일당이 반격을 시작했음을 알리는 사건이다. 박근혜 퇴진 운동은 어버이연합의 손석희 사장 고발을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운동의 규모를 키우고 심화시켜야 한다.

김인식

몽니 부리는 박근혜, 내분 겪는 여당, 눈치 보는 야당

12일 이후에도 투쟁은 계속된다

김문성

박근혜는 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된 직후부터 열흘 새 두 번이나 대국민사과를 했다(10월 25일, 11월 4일). 11월 8일에는 국회의장 정세균을 만나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던 박근혜가 두 번이나 머리를 조아리며 계속 아쉬운 소리를 한 것은 상황의 심각성 때문이다. 물론 늘 그랬듯이 책임 회피와 콧수염인 거짓 사과였지만 말이다.

첫 번째 사과 이후 도리어 국정수행 지지율은 한 자릿수로 폭락했다(한국갤럽 2주 연속 5퍼센트, 퇴진(탄핵 포함) 지지는 60퍼센트도 넘어섰다(리얼미터)).

무엇보다 여론이 강력한 행동으로 보기 드물게 표출되고 있다. 11월 5일에는 약 20만 명이 광화문 일대에서 밤늦게까지 행진과 시위를 벌였다. 구호는 압도적으로 “박근혜 퇴진/하야”다. 국민 초기 역풍론이 무색하게도 투쟁이 커지고 퇴진 요구를 분명히 하면서 박근혜 지지율은 더 하락했다.



기회 '즉각 퇴진'을 목표로 대중투쟁을 강화하려 해야 한다.

이 와중에도 새로운 폭로가 쏟아지고 있다. 박근혜가 기습적으로 임명하려 한 국민안전처 장관 박승주는 궂판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자진 사퇴했다. 박근혜가 자신은 청와대에서 궂을 한 적이 없다고 굳이 해명한 직후에 일어

난 일이다.

시능뿐인 검찰 조사에서조차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기업주들이 죄다 ‘뺨 뜯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안종범은 기업 대상 모금이 박근혜의 지시였다고 자백했다. 김기춘

이 정권 비판 세력 죽이기를 위한 공작 정치를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근혜 정권 자체가 범죄 집단이고, 청와대가 정경유착, 부정 축재의 사령탑이자 몸통인 것이다.

김기춘, 우병우 등 청와대 실세들과 최순실 등 ‘비선 실세’들이 정부 부처와 검찰 등 국가기관들을 움직여 기업들과 특혜를 거래하고 국가 예산을 자신들 호주머니로 옮겼다. 이것은 더한층의 매수와 특권 구축에 사용됐을 것이다. 다급해진 최순실, 장시호(최순실 조카), 차은택 등이 급매로 내놓은 부동산 시세만 5백억 원이 넘을 지경이다.

농단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선에서 한국 정부 예상과 달리 트럼프가 당선됐다. 경제·안보 위기(불확실성)가 커지는데, 박근혜가 한국 국가를 다잡아 위기에 대처할 수 있을지 지배계급의 걱정도 커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는 이미 11월 아펙(APEC) 정상회의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한국 대통령의 불참은 아펙 정상회의의 창설(1993년) 이래 처음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수습책을 놓고 여권 전체가 내분에 휩싸였다. 전 당대표 김무성은 박근혜의 탈당을 요구했고, 비박계는 당대표 이정현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대로 물러서면, 친박이 모두 죽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정현과 친박계는 버티는 중이다. 그러나 ‘최순실을 모르는 게 거짓말’이라고 말한 게 김무성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농단을 알면서도 빌붙어 출세와 특권을 챙겨 온 새누리당 전체가 공범 집단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대구·경북에서조차 민주당에 뒤처지기 시작했다. 의원총회에서 서로 쌍욕이 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국정 운영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자 청와대는 당선 하루 만에 트럼프와 통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야당을 향한 국정 정상화 압박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두 주류 야당들은 박근혜의 ‘2선 후퇴’만 요구하며 그에게 시간을 벌어 줬다. 특히, ‘문재인 당’인 민주당은 ‘책임총리’ 방안을 수용해 박근혜의 구원투수가 될 뻔했다.

박근혜는 한 걸음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

박근혜 4년의 교훈 중 하나는 박근혜의 통치 스타일과 개인의 개성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계급의식적이지만 욕심과 의심도 많아, 재산뿐 아니라 권력도 측근 실세와만 농단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죄의식도 없다. 그랬다면, 세월호 참사나 백남기 농민 문제에 그렇게까지 잔인하고 야비하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복지 공약 파기하고도 그토록 뻔뻔하지 못했을 것이다.

박근혜 게이트가 부정 축재와 공작 정치가 결합된 형태인 이유이고, 기업주들이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해 박근혜를 선택하고 지지한 이유다.

그러나 ‘국회가 정해 주는 사람을 총리로 뽑고 내각 통할권까지 주겠다’는 박근혜의 방안도 의심해 봐야 한다. 총리의 내각 ‘통할’은 이미 단어 그대로 현행 헌법에 명문화돼 있다. 결국 헌법상 권한을 총리에게 주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권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에 앞장선 금융위원장 임종룡을 경제부총리로 임명한 것도 도발이다.

총리에게 내각 제청과 통할권을 주더라도, 대통령이 결재하고 총리 임명권도 갖고 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지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조금도 후퇴가 아니다. 국정 마비 상황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분열시켜 보려는 “뒀”일 뿐이다. 타고난 모사꾼

답다.

사실 두 번의 대국민 사과도 고개는 숙였지만, 기만적이었다. 빼도 박도 못할 사실만 인정했고 자신의 연루 혐의는 축소·부인하며 최순실 개인 비리로 떠넘겼을 뿐이다.

다행인 것은 사람들이 이제는 잘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국민담화가 오히려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이고, 검찰이 최순실에게 대국민담화를 보여 준 것은 공범끼리 소통하게 해 준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진 것이다.

따라서 2선후퇴론, 책임총리론 등 박근혜 퇴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수습책은 아무 의미가 없고 단지 기만일 뿐이다. 즉각 퇴진을 위한 대중 투쟁을 이어가며 강화해야 하는 까닭이다.

좌파가 자기 색깔 드러내지 말라는 주장은 틀렸다

박근혜 퇴진 운동 일각에서는 ‘운동권(좌파)이 운동에 정치적 길라잡이 구실을 하려 하는 것은 시민의 자발성을 억누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9일 출범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같은 단체들도 시민의 자발성을 보조하는 구실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와 ‘리더십’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를 대중의 자발성 또는 ‘순수 운동’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운동주의적 주장이다. 운동의 단결을 위해 정치를 배제하자는 견해다.

책임

그러나 이 주장은 이 운동의 성격 을 오해하는 것이다. 이 운동은 정권 퇴진 운동이라는 성격상 처음부터 정치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그래서 초기부터 민주노총, 노동자연대와 진보연대를 비롯한 정치 좌파, 정의당·노동당·민중연합당 등이 적극적인 일원이었다.

그러나 이 운동의 초기에 좌파의 주도력이 오히려 대중의 자발성에 부합하고 그것을 더 북돋웠다. 10월 29일 집회가 그 예다. 당시 퇴진 요구를 꺼렸거나, 과단성 있게 행진을 조직하지 않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대중의 자발성을 억누른 결과가 됐을 것이다.

온건한 진보 시민단체들도 주류 ‘야당’들과 연결돼 있다. 이 당들도 운동 바깥에서 언론 등 다양한 수단으로 운동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 이

런 성격 때문에 참가자들도 기성 야당들부터 좌파들까지 정치적 주장과 계획에 관심이 크다. 정치적 지도가 필요함을 이해하기 때문에 통일된 구호(“퇴진/하야”), 중앙집중적 행진, 좌파와 노조의 깃발에도 거부감이 별로 없다.

따라서 이 운동의 성공에 일조하려는 정치세력들은 전망과 과제를 내놓아야 한다. 즉, **운동의 성격에 걸맞게 정치적 리더십을 제공하려 노력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다.**

이처럼, 정치와 리더십을 배제하는 주장은 운동에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을 떼어내려 한다는 점에서 공상적이다.

따라서 온건 개혁 세력이 대중의 정서를 확인하고 뒤늦게라도 운동에 합류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무임승차하자마자 막무가내로 운전대부터 뺏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노동운동과 선명 좌파의 주도력을 제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누구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운동의 주도권을 농단하려 하지는 말아야 한다. 누구나 실천에서 입증 받으며 정직하게 기회를 노려야 한다.

물론 지금 박근혜 퇴진 운동 참가자들 다수가 좌파적 강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래서 좌파는 개방적이면서도 급진적으로 운동을 이끌려고 노력해야 한다.

운동이 더 보편적이 되고 (사회적 내용 면에서) 심화하도록 노동자 투쟁과 연결되는 것도 조직해야 한다.

주류 야당은 박근혜 구원투수가 될 것인가?

박근혜의 뻔한 수작을 덩싹 물으려 한 것은 민주당 현 지도부와 문제인이 내년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할 ‘중립’ 내각 수립에 온통 관심이 가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은근슬쩍 이를 묵인했다.

고통전가, 세월호, 복지 축소, 노동개악, 사드, 민주적 권리 침해 등 4년 동안 눌러 왔던 대중의 분노가 분출하는 시기에 박근혜·새누리당과 협조해 그 분노를 가로막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도 안철수·박지원이 서로 역할 분담하며 눈치 보기를 하다가 10일에야 박근혜 퇴진으로 당론을 정했다. 게다가 이 틈에 중립내각 총리 자리를 한 번 누려 보려고 야당의 퇴진

요구에 반대하는 손학규 같은 자들도 있다.

자본주의 야당들은 집권해도 경제 상황 때문에 고통전가 정책을 펴야 하는 처지에서 지금의 운동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기층의 압력 때문에 결국 야 3당 대표가 박근혜 제안을 거절하고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당 차원에서 참가하기로 결정했다.(야3당 지지율 합계보다 퇴진/탄핵 지지율이 더 높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퇴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총궐기에 함께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집회·행진에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좋은 일이지만, 두 야당이 정략적으

로, 그것도 이제야 운동에 올라타서는 대 여권(협상) 압박용으로만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여태까지 뒤통수쳐 온 일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지금 거리의 대중 운동도 박근혜를 살려 준 어설픈 수습책에 만족할 것 같지는 않다. 12일 민중총궐기는 근래 보기 드물게 크고 정치적인 시위가 될 것 같다. 이는 운동이 수도권 바깥으로도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2일 집회의 성공은 박근혜를 더 위협하겠지만, 박근혜는 시간을 벌며 반격을 준비할 것이다. 다행히 이후에도 대중 투쟁 계획이 잡혀 있다. 대중의 자력 투쟁이 진짜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11월 5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은 한층 더 커졌다. 서울에서만 2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다른 도시들에서도 몇 만 명이 나왔다. 12일 퇴진국민행동 주최 집회에는 50만~1백만 명가량이 참가할 듯하다.

이 운동은 박근혜의 위기를 빠르게 심화시키고 있다. 박근혜는 열흘 만에 두 번이나 사과했지만, 지지율은 5퍼센트로 곤두박질쳤다. 역대 대통령 중 최저 수준이다.

박근혜 퇴진 운동은 1990년대 이후의 대규모 항의 운동들과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이번 운동은 단일 쟁점을 놓고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권위 자체에 도전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 권력에 도전하는 것은 1987년 격렬한 시위와 그에 이은 수많은 경제적 대파업으로 군부 독재 정권을 압박해,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민주적 기본권들을 쟁취한 이래 처음이다.

2008년 촛불 운동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핵심 요구로 하되 다른 몇 가지 요구가 결합됐다. 6월 10일을 기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퇴진을 공식적 요구로 내놓자고 주장했지만, 촛불 운동 내 온건파들이 반대에 공식적 요구로 채택되지 못했다.

1996년 12월 26일 노동법과 안기부 법의 날치기 통과로 연말연시 정공을 뒤흔든 민주노총 총력 파업과 대중 항의도 공식적으로는 대통령(김영삼)의 퇴진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했다.

둘째, 이번 운동은 노동단체와 좌파단체들로 이뤄진 민중총결기본부가 시작했다는 점에서 과거 NGO들이 시작한 대규모 항의 운동과 다르다. NGO들은 자의식적으로 계급과 좌파 정치를 거부하고 그 대신 '국민'과 점진적 개혁주의를 지향한다.

셋째, 운동에서 조직 노동자들의 존재감이 실제로 있다. 2008년 촛불 운동 같은 이전 운동들에서는 노동조합과 좌파단체 성원들도 '개별 시민'으로서 참가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반면 이번에는 조직 노동자들이 시위대 전체의 환영을 받고 있다. "(조직)노동자들이 고립됐다"는 진보 진영 우파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는 점이 (철도 파업에 대한 청년·학생들의 지지 표명에 이어) 또다시 입증됐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박근혜를 몰아내자! 박근혜는 퇴진하고 노동개악 철회하라!



사진: 이현우

넷째, 위의 특징들 덕분에 진보진영의 좌파는 운동에서 주도적 구실을 하기에 과거의 어느 때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물론 이 점은 잠재력 차원이고 유동적이다. 운동의 자원이 갑자기 넓어져 새로 참여하는 대중의 개혁주의적 의식을 반영하는 개혁주의 지도력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는 점이 (철도 파업에 대한 청년·학생들의 지지 표명에 이어) 또다시 입증됐다.

때문이다.

가령 신설 연대체 '퇴진국민행동' 안에는 박근혜를 어떻게 퇴진시킬지를 두고 논쟁이 있는데, 자민통계와 NGO 리더들 같은 진보적·자유주의적 민중(국민)주의자들은 부르주아 야당들인 민주당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과의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조직 노동자 운동과 좌파의 존재를 하찮은 위상에 묶어 두

고 싶어 한다.

박근혜가 실제로 퇴진하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열쇠는 노동자들의 참여에 달렸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운동에서는 노동자들의 존재감이 있을 뿐 아니라 시위대의 환영을 받는데도, 퇴진국민행

동 지도자들은 노동자들이 운동에 많이 참가하라고 공식적으로 호소하지 않고 있거나, 대다수 노조 지도자들에게도

파업은 언제나처럼 언급생심이다.

'민주변혁단계'론자들은 현 시국을 국민(민중) 혁명 직전의 시기로 볼지 몰라도, 노동자 혁명의 전략을 추구하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들과 철술들이 다르다. '민주변혁단계'론자들은 박근혜 퇴진 후 그들이 참여하는 민주국민내각 따위를 제안하는 듯하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성격은 종속 경제와 반(半)식민지 국가가 아니라 선진 산업경제와 부르주아(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국가형태를 본질적인 특징으로 한다. '민주변혁단계'론은 실천에서 개혁주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히, 좌파가 자본주의적인 정당들과 함께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운동에 큰 해를 입힐 일이다.(크리스 하먼과 팀 포터가 쓴 '노동자 정당이 집권하면 노동자 정부인가?'(《마르크스21》 10호)를 보시오.) <http://bit.ly/the-workers-government>

반면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계급의 항의 시위 참가와,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파업(정치총파업만이 유의미하다는 주장은 마르크스주의가 말하는 '정치'의 의미를 오해한 데서 비롯한 경직된 전술이다)이 당면 과제들이라고 본다. 11월 9일 한국지엠(GM) 부평공장 노동자 5백 명이 공장에서 부평역까지 행진한 것은 좋은 본보기이다. 또, 울산산렌트건설 노동자 파업도 정말 훌륭하다.

또한 노동계급 운동의 좌파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하도록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조합원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겨우 며칠 만에 조합원 8천 명가량이 서명했는데, 현 상황은 민주노총 좌파들과 투사들이 지도부를 압박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철도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내놓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는 단순히 고립됐다 해서(지지율 5퍼센트) 순순히 물러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재벌들과 고위 국가관료들이 이윤을 위해 모두 그에게 등을 돌려야 비로소 물러날 수 있다. 지금 이들은 정치적 부패만으로 박근혜를 제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박근혜가 노동개악과 시장경제 확대를 위해 애쓴 공로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좌파라면 지금 열리고 있는 격변기에 계급투쟁(정치적 및 경제적)을 건설하는 데 헌신해야 한다.

대학에서 운동 건설하기

학생회로 충분한가?

정선영

얼마 전 여러 대학에서 시국선언이 발표했다. 많은 대학에서 총학생회와 다양한 좌파 단체 등이 시국선언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좌파 단체가 주도해 다른 학생 단체와 개인들을 모아 시국선언을 발표한 곳도 있다.

그러자 한 가지 논란이 벌어졌다. 왜 총학생회가 아닌 단체가 시국선언을 주도하느냐. 총학생회는 전체 학생을 대표하는 기구인데 왜 다른 단체들의 이름을 연명해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를 일부 학생들이 한 것이다. 이런 의의제기 때문에 일부 대학에서는 여러 단체를 배제하고 총학생회 중심으로만 박근혜 퇴진 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봐도 이런 주장은 터무니없이 비민주적인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회는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선출한 기구이므로 학생회 이름으로만 시국선언을 해야 한다는 이들 주장의 논리를 따르다면, 시민들은 국회의원이나 시장, 구청장 이름으로만 견해를 발표해야 한다는 셈이기 때문이다. 결국 공식적으로 선출된 사람·기구만이 견해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은 보통 시민이나 학생은 적극적으로 나서 견해를 밝히거나 운동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매우 비민주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운동주의

한편 학생회만 운동을 대표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에는 '운동(만능)주의'도 포함되어 있는 듯하다. 운동주의는 다양한 정치단체들이 자기 정치를 드러내면 운동이 분열한다고 보면서, 정치조직은 불필요하고(심지어 없어져야 하고) 운동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 견해를 말한다. 그래서 정치조직들이 자기 정치를 드러내지 말고 학생회 같은 일상 조직으로 용해돼야 한다고 여긴다. 흔히 운동에 처음 참가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곤 한다.

그러나 정치가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초보적인 수준일지라도 말이다. 무술리나의 감옥에 수감됐다

사망한 이탈리아 마르크스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 말대로 "누구나 철학자다".

학생회도 비정치적인 조직이 아니다.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그 정치색이 다양하다. 대학 시국선언에서 어떤 학생회는 박근혜 퇴진 요구를 걸었지만, 또 다른 학생회들은 퇴진을 분명히 요구하지 않고 대통령 특명 요구 등을 걸었다. 이것만 봐도 학생회의 정치색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박근혜 퇴진 운동이 학생회로만 표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은 (본의가 아닐지라도) 학생회를 집행하는 학생들과 정치 성향이 다른(흔히 더 좌파적인) 학생들이 자신의 정치를 표현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운동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주장을 펴지 말아야 운동이 단결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다. "어떤 운동이든 단선적 논리에 따라 발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운동의 국민이 바뀔 때마다 참가자들은 투쟁 방법 등을 놓고 선택을, 결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단결은 의식적으로 정취해야 하는 것이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이 각각의 몸값과 대결해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운동이 더 크게 단결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운동은 부분별로 실패하게 된다."(《노동자 연대》 178호에 실린 최일봉의 '정치단체의 개입은 운동의 순수성을 훼손하는가?')

반대로, '정치 배제'를 빌미로 다양한 단체들이 의견을 내는 것을 막는 것은 오히려 운동 내에서의 비민주주의와 음모적 권모술수로도 흔히 이어질 수 있다. 서로의 정치를 드러내고 공개적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다른 명분을 들어 자신과 다른 정치 경향을 공격하려 하기 때문이다. 학생회는 아니었지만 이화여대 분관 점거 농성자들이 "운동권"을 배제하자며 캠퍼스의 왕 노릇을 하려 한 사례에서 이 문제점을 딱뚫히 볼 수 있었다. 다시금 그람시의 말을 빌면 "지도는 지배가 아니다."

우파적

실제로, 좌파 단체들이 시국선언 조직에 착수한 것에 이의제기한 사람들은 주로 좌파에 반감을 가진 학생들인 듯



사진: 김지현

11월 5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전국 동시발 대학생 시국대회 공식 학생회 기구가 움직일 때까지 학생들은 대기하고 있어야 하나?

하다. 20대의 60퍼센트가량이 박근혜 퇴진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퇴진 지지자 중에도 중도적 정치 성향 때문에 좌파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학생이 총체적으로 몰아가라는 우파적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이번 호 《노동자 연대》 웹 사이트에 실린 장호종의 '박근혜 퇴진 대학생 시국선언 관련 온라인 논쟁: 가상과 현실을 구분해야 할 보라.' 이들은 운동에 처음 참가하는 사람이 쉽게 받아들이는 소박한 단결 정서를 이용해 좌파를 밀어내려 하는 것일 게다.

사실 시국선언은 학생회로만 표현해야 한다는 일부 인터넷 주장에 대해 내부 좌파가 타협해서 문제를 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추수주의는 형식주의적 민주주의관 때문에 학생회 같은 공식 기구의 권위를 과도하게 보는 그들의 오해가 반영돼 있다.

선출된 대표자들이 모든 사람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학생들은 보통 때는 소외와 천대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비활성적 상태에 있다가도 정의감을 자극하는 특정 사건 등을 계기로 갑자기 투쟁에 나서게 되는 경향이 있어, 그 격차가 매우 크다. 지금처럼

학생들의 의식이 급변할 때는, 일상적 시기에 선출된 학생회가 학생 다수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므로 선출된 대표의 권위를 분히 있을 수 있다. 또,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해 여론을 좌파에게 공격적으로 몰아가려는 우파적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이번 호 《노동자 연대》 웹 사이트에 실린 장호종의 '박근혜 퇴진 대학생 시국선언 관련 온라인 논쟁: 가상과 현실을 구분해야 할 보라.' 이들은 운동에 처음 참가하는 사람이 쉽게 받아들이는 소박한 단결 정서를 이용해 좌파를 밀어내려 하는 것일 게다.

최근 이화여대에서 학생 2백36명의 서명으로 정유라 관련 비리 척결과 박근혜 퇴진을 위한 학생총회가 발의됐다. 그런데 일부 중앙운영위원들은 이 총회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 학생회의 약점을 보여 주는 사례다. 게다가 학생회는 다양한 학생을 포괄하는 일상 조직이라는 성격 때문에 후진적 관념의 압력을 받기 쉽다. 그래서 박근혜 퇴진 여론이 대규모로 표출되는 현재 국면에서조차 일부 학생회가 일부 인터넷 글들에 흔들린 것이다.

현실에서 여러 운동은 학생회로 표현되지 않았다. 이화여대에서 86일간 끈질기게 이어진 분관 점거 투쟁은 학생회가 주도한 것이 아니었다. 이화여대 점거 농성이 끈질기게 이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운동의 초점 구실을 할 수 있었던 한 점거 농성 덕분이었다. 분관 점거 농성 주도자들이 총학생회나 좌파(특히 노동자연대)를 배타적으로 대한

것은 잘못이었지만 말이다.

2011년 서울대 학생들의 법인화 반대 점거 투쟁은 반대 사례다. 당시 서울대 본부 점거 농성에 열의 있게 참가하고 있던 학생들은 실제로 점거 농성이 유지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점거에 참가하지도 열의도 별로 없던 학생회들은 점거 농성 해제를 결정했다. 이는 학생회가 투쟁을 대변하기는커녕 배신한 것이다.

물론 공식 기구라는 성격 때문에 때로, 학생회가 주도하는 운동에 학생들이 더 많이 참가할 때도 있다. 따라서 대중 투쟁이 커지길 바라는 좌파적 활동가들이 학생회 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때로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도 아니거나(학생 일반의 정서가 박근혜 퇴진 여론이 대규모로 표출되는 현재 국면에서조차 일부 학생회가 일부 인터넷 글들에 흔들린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일관되게 전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치를 추구하는 학생들이 상당한 기반을 갖출 때 학생회 집행관 활동이 유용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회 활동가들이나 다른 여러 학생들을 더욱 투쟁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학생회 참여 전에 먼저 혁명적 정치조직 건설이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 퇴진 운동

노동자들도 시위 참가와 파업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자

이현영

박근혜 퇴진 운동의 중요한 특징은 초기부터 조직 노동자들의 동참이 무시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행에 맞서 파업을 벌이던 철도 노동자들이 퇴진 운동의 선두에 섰고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에서 퇴진 운동의 주력 부대를 형성하고 있다. 매일 열리는 촛불 집회와 행진에도 철도 노동자들이 절반 이상의 대열을 이루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도 해고와 임금 삭감을 강요하는 조선업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는 파업을 하고 있다. 23일

에도 파업이 예정돼 있는데, 파업을 하고 구조조정 중단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영남권 노동자대회에 참가한다. 9일에는 GM자동차 노동자들도 공장 안 집회를 마치고 수백 명이 부평역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다. 11월 5일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4만 2천 명이 동참한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11월 12일 노동자대회에 전국에서 10만여 명 이상의 조직노동자들이 참가한다. 이 날 시위는 박근혜 퇴진 운동이 시작된 후 최대 규모 집회

가 될 것이다. 이처럼 민주노총 소속 조직 노동자들이 주된 대열을 이루는 집

회라는 점 때문에 정부와 우파, 반박근혜 대중 모두 민중총결기의 규모와 분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근혜 퇴진 입장에 거리를 뒀 온 민주당 지도부도 이런 상황의 압력을 받아가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겠지만 말이다.

박근혜가 기반적인 두 차례 대국민 사과를 통해 권력을 내려놓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십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앞장선 수도 서울에

가 될 것이다. 이처럼 민주노총 소속 조직 노동자들이 주된 대열을 이루는 집

노동개악 폐기

12일 노동자대회와 민중총결기 이후 이 기세를 이어가야 한다. 모두가 박근혜의 악행에 들고 일어서는 이때, 노동자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 가능하면 파업이 결합되면 좋겠다.

노동개악 추진에서 보듯, 대기업과 사용자들의 이해를 철저히해 대변해 온 박근혜와 그의 세력이 마비되고 내분이 극에 달하는 상황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사용자에게 맞서 싸우기에도 좋은 때다.

예컨대, 최근 서울대병원 노조가 파업으로, 그리고 고대병원·보훈병원 노조는 파업 직전에 사측의 임금 공격을 일단 막아냈다. 다른 부분에서도 노

동자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요구를 정취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야 한다. 무엇보다 아직 노동개악이 전혀 폐기되지 않았다. 철도공사 사장 흉순만은 지금도 '정부 지침이 바뀌지 않은 상황'을 거론하며 내년에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퇴진 운동에 합류해 노동개악 반대 투쟁을 힘껏 벌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들의 대규모로 거리 시위에 동참하는 것과 함께 파업을 벌이면 효과가 훨씬 커진다. 파업은 노동자들을 대거 시위에 동참시키는 데도 효과적

▶ 5면으로 이어짐

▶ 4면에서 이어짐

이지만, 무엇보다 사용자들의 이윤에 타격을 가해 박근혜의 핵심 기반을 흔드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를 더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고 지배계급의 분열을 더 촉진할 것이다.

11월 2일 열린 민주노총 비상시국회의에서도 민주노총의 파업이 필요하다는 공감과 촉구들이 상당했는데, 그때 지도부가 바로 파업을 결정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었다.

민주노총의 일부 지도자들이 '현장의 결의를 모아 오면 파업을 선언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사실 경험에 있는 노동자들이라면, 이 주장은 지도부가 파업 결정을 회피하기 위한 상투적인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 5면으로 이어짐

것을 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의 파업 결정을 바라면서도 과연 이것이 이루어지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를 더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고 지배계급의 분열을 더 촉진할 것이다.

최근 민주노총 지도부에게 지금 즉각 총파업을 선언하라고 촉구하는 서명에는 불과 열흘 만에 조합원 8천2백여 명이 동참했다. 50일 가까이 파업 중인 철도 노동자들과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이 대거 동참했다.

기아차 현장 제 조직 및 정당 현장위원회 11개 단체들도 민주노총 파업을 결정하고, 기아차 지부가 앞장서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철도와 건강보험노조 등의 활동가들이 포함된 '공공운



11월 11일 민주노총 총파업 성사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사명자 기자회견

수 현장활동가 모임'에서도 "11월 11일 민주노총 총집회에는 망설임 없이 총파

업을 선언"해 철도와 공공 파업을 '민주노조의 연호와 민주노조 운동의 연대'

로 승리를 앞당기자고 호소했다.

이런 사례들은 지도부의 결단이 상황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운동 내 일부 좌파가 지도부에게 파업을 선언하도록 촉구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의 결의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몰타기이다. 이는 오히려 노조 지도자들의 투쟁 회피를 옹호해 주고 정태적으로 사태를 추수하는 것이다.

노동운동의 좌파 활동가들은 지도부가 진지하게 파업을 선언하고 조직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지도부의 파업을 결정하면, 그것을 이용해 기층 노동자들이 투쟁에 동참하도록 활동을 적극 벌여 나가야 한다.

조선업 구조조정

노동자가 아니라 위기를 낳은 정부와 기업주가 책임져라

강동훈

11월 10일 박근혜 정부는 완전자본 잠식에 빠져 상장폐지에 몰린 대우조선해양에 2조 8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산업은행이 1조 8천억 원을 출자전환 하고, 수출입은행은 영구채 1조 원을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정부가 10월 31일 내놓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할 것임이 분명해졌다.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빅3 체제(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를 유지하고, 조선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8년까지 정부 지원 등으로 '버티기'를 하겠다는 방안이다.

이 방안이 발표되자 지배자들(대기업과 고위 국가관료)의 일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며 말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대우조선을 청산하면 금융권과 협력업체 등에 5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지원해야만 한다는 견해다.

구조조정을 둘러싼 지배자들 사이의 갈등은 이뿐이 아니다.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도 공급 과잉 업종이라며 기업 간 인수합병과 설비 폐쇄 등으로 과잉 설비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올 3분기에 포스코는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기며 4년 만에 최대 수익을 냈고, 현대제철은 부채비율을 빠르게 낮추며 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렸다. 그러자 철강 설비를 감축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힘을 잃고 있다.

마찬가지로, 최근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석유화학 기업들도 합병과 설비 감축에 저항하고 있다.

일부 지배자들은 과잉 설비를 지금

감축하지 않으면 앞으로 감당하기 힘든 피해가 올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다른 지배자들은 중국·일본 등이 설비 감축에 나서고 있으니 조금만 버티면 더 큰 시장을 차지할 수 있다며 반발하는 것이다. 이런 논란은 구조조정 방향을 둘러싸고 지배자들 사이의 갈등이 매우 첨예하다는 점을 다시금 보여 줬다. 이런 갈등이 최근 정치 위기의 한 주요 요인이었을 것이다.

한 목소리

지배자들은 어느 기업을 죽이고 어떤 설비를 폐쇄할지를 두고 첨예하게 갈등을 빚지만,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고통을 떠넘기는 데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2018년까지 조선 3사의 직원 인력을 6만 2천 명에서 4만 2천 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지난달 '희망퇴직'을 시행해 1천2백 명을 해고하기로 했고, 추가로 3백 명을 추가 해고하겠다고 밝혔다. 분사화로 수천 명을 비정규직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놔다. 게다가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대우조선 노조에 11월 16일까지 구조조정 수용과 무파업 등을 약속하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대중공업도 해고와 분사화 등으로 수천 명을 감축하고 임금을 삭감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전자, 건설장비 부문을 분사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추가로 7천~8천 명이 비정규직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조선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불안도 계속되고 있다. 수많은 조선 하청업체들이 폐업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고 체불임금



박근혜의 정치 위기를 이용해 구조조정에 맞서야 한다 10월 29일 거제에서 열린 조선하청 노동자 대행진.

으로 고통받고 있다. 조선회사들은 이 자리를 임금이 더 낮은 단기 하청, 일당직 등으로 채우고 있다.

그러나 조선 노동자들은 위기에 책임이 없다. 한편으로 정부는 해양플랜트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우리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선회사의 저가 수주를 부추겨 위기를 키웠다. 다른 한편, 2004~13년 동안 현대중공업은 23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고, 그중 총수 정몽준은 3천억 원에 이르는 배당금을 받았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은 별로 늘지 않았다.

그런데 위기가 오자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따라서 한 치 앞도 예측하지 못하고 저가 수주를 늘려 온 정부와 기업주들에 맞서 조선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구조조정에 맞서 매주 한 차례씩 4시간 파업을 하고, 이 투쟁을 박근혜 퇴진 투쟁과 결합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도 '일방적 자구안 완전철폐', '노동자 총고용 보장', '분사 결사반대' 등을 내세우고 있고, 대우조선 노조도 구조조정 동의서를 거부하고 사업부문 분사와 해고 등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위기는 노동자들이 다시금 투쟁에 나설 자신감을 심어 주고 있다. 이런 투쟁이 노동자들의 박근혜 퇴진 시위 참가와 파업으로 발전해 생산을 실질적으로 마비시켜야 기업주와 정부의 공격을 물리치고, 임금과 고용을 지킬 수 있다.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폴란드 사회주의자 인터뷰
“낙태권 운동이 낳은 급진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는 왜 큰 위기를 맞게 됐을까?
- ★ 필리핀
두테르테는 정말 미국 제국주의에 반대하는가?
- ★ 박근혜 퇴진 운동을 둘러싼 학생운동 내 논쟁
- ★ 대학생 시국선언을 둘러싼 온라인 논쟁
가상과 현실을 구분해야
- ★ 세종호텔 투쟁
임금 깎고, 해고 늘리는 전 직원 성과연봉제 결정을 철회하라
- ★ 반올림
직업병 피해자 외면하며
최순실에게 돈 바친 삼성

울산플랜트건설 노동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가다

장우성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가 11월 8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조합은 임금 인상, 고용 보장, 유급 휴일 확대, 노동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해 왔다. 10월 21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건설사들과 주요 발주처인 S-OIL이 양보하지 않았다. 그러자 11월 8일부터 전면 파업으로 투쟁을 확대했다.

노동자들은 “제대로 설 권리, 고용 불안에 떨지 않을 권리, 땀 흘린 만큼의 실질임금을 받을 권리”를 요구한다.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노동자들은 늘 사고의 위험을 감내하며 일한다.

지난 10월 14일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울산 현장 폭발 사고로 플랜트건설 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6월에는 울산 고려아연 공장의 황산가스 누출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8월에도 S-OIL 울산 공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감전돼 목숨을 잃었다.

공기업이 발주를 하건, 대기업이 공사를 주관하건 간에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는 기본 안전 매뉴얼이 생략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돈 때문이다. 이런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 환경 때문에 노동자들은 줄기차게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기업들은 이를 외면했다.

미르재단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이 종종 ‘목숨 이랑 맞바꾼 것’이라고 표현하는 임금이 울산에서는 4년간 동결됐다. 올해도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건설업체들은 되레 임금 동결을 들고 나왔다.

하청업체인 건설사들뿐만 아니라 발주처도 이윤 때문에 노동조건 개선에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울산에서는 역대 최대 단일 프로젝트라는 S-OIL 제2울산공장 플랜트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장 5개를 동시에 건설하는 이 프로젝트는 1만 명의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다.

S-OIL 제2울산공장 프로젝트는 박근혜 정부 투자 활성화 대책의 최대 수혜 사례로 꼽힌다. 4조 5천억 원 규모의 이 공사는 요즘 ‘미르재단’ 사건으로 종종 언론에 언급되는 대림산업이 대우건설과 공동으로 수주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노동자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서로 특혜와 이익을 주고받는 동안 현장에서 동료들이 목숨을 잃고 임금 동결을 강요받아왔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S-OIL은 2분기에 매출 4조 1천9백 84억 원과 영업이익 6천4백29억 원을

올려 사상 최대 영업이익률인 15.3퍼센트를 달성했다. 그러나 현재 임단협 체결 대상인 건설사 27곳 중 S-OIL 공사에 투입되고 있는 업체 20곳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이 기사를 쓰고 있는 11월 11일에도 이른 새벽부터 대체인력 투입을 막기 위해 S-OIL 공장 출입문 봉쇄에 나선 울산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을 경찰이 공격해서 조합원 6명이 연행됐다. 노동자들은 박근혜·최순실 부패로 이미 박근혜 정부가 정당성을 완전히 잃은 이 마당에도 경찰이 기업의 용병처럼 구는 것에 황당함과 분노를 터뜨렸다.

파업 중인 울산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은 12일 전국의 플랜트건설노동자들과 함께 상경해서 S-OIL 본사 앞 항의 집회를 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노동자대회와 민중총궐기에 참가할 예정이다.

서울북부건설기계지부

“박근혜 퇴진” 하루 파업을 하다

전국건설노조 서울북부건설기계지부는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11월 12일 노동자대회와 민중총궐기에 참가하기 위해 하루 파업을 하기로 했다.

나는 12일 집회에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부에 파업을 제안했다. 지부 운영위원회는 이 제안을 수용했다. 평소 같으면 지역 건설 현장 쟁점이 아닌 정치 쟁점으로 파업하는 것에 무관심하거나 싫어했을 조합원들도 이번에는 적극 호응하는 분위기다.

하루 파업 결정 덕분에 12일 집회에 수백 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박재순

건설노조 서울북부건설기계지부 조합원

어쩌다 트럼프 따위가 백악관 주인이 됐나

김준효

트럼프가 당선한 이유에 대한 가장 흔한 설명은 ‘인종차별적 · 성차별적 백인 중하위층’이 새로이 대거 분출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종차별적 우파들이 기세 등등해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그림을 보면 상황이 단순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얻은 백인 표는 5천1백만 표로, 전체 백인 유권자의 25퍼센트 미만이다. 이 수치는 2008년 매케인(5천3백50만)이나 2012년 롬니(5천5백만)가 득표한 것보다 수백만 표 적은 것이다. 인종차별적 백인들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다.

저소득층 지지가 몰리지도 않았다.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중하위층에서나 3만 달러 이하 빈곤층에서 모두 트럼프 지지는 힐러리 클린턴보다 10퍼센트포인트 낮은 40퍼센트 대 초반의 지지를 받았다.

공화당 텃밭인 남부와 일부 중서부 지역에서 득표가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는 이 지역들에서 1천8백만 표를 얻었는데, 이는 지난 두 대선 때 공화당이 얻은 표와 거의 같은 숫자다. 전국 득표(5천9백만여 표)도 마찬가지다.

지난 대선과 가장 크게 달랐던 점은 민주당의 오랜 ‘텃밭’이었던 오대호 연안의 옛 제조업 지역들(위스콘신 · 미시건 · 인디애나 · 펜실베이니아 · 오하이오)에서 민주당 지지 노동자 표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8년 전 오바마에게 투표했었던 이 지역 노동자의 20퍼센트가 이번에는 트럼프를 찍거나(약 90만 명) 기권했고(약 1백40만 명), 공화당은 레이건 이후 처음으로 이 지역들에서 다득표 정당이 됐다. 선거인단을 2백70석 확보하면 이기는 선거였는데, 상대방의 안방에서 무려 75석을 빼앗은 것이다.

이 지역에서 트럼프 지지로 넘어간 표보다 기권표가 많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곳 노동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이번에는 미국 노총 AFL-CIO의 투표 지침에도 불구하고 노조원과 그 가족의 절반만이 클린턴에 투표했다. 오바마 임기 8년 동안 산업 구조조정과 공장 역외 이전 때문에 실업률 · 빈곤율이 크게 오르고 실질임금 · 복지가 삭감된 것 때문이었다.

본지가 9일 논평(미국 대선: 트럼프의 승리라기보다는 클린턴의 패배 — 미국 주류 정치도 시궁창임을 보여 주다)에서 지적했듯, 트럼프가 얻은 것이 아니라 클린턴이 잃은 것이 결정적이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불평등과 양극화, 쓰라린 기성 정치 거부 정서

클린턴이 대자본, 월가, 군부 대다수가 지원한 후보임이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에 맞서 클린턴이 “미국은 이미 위대하

다”고 말할 때, 오랫동안 불평등과 생활수준 하락에 시달려 온 노동계급 사람들이 수천만 명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특히 오바마 임기 8년 동안 노동자 실질 소득은 하락한 반면 기업들은 ‘구제’ 금융을 수조 달러 챙기는 등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바로 이것이 미국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쟁점이었다. (‘점거하라’ 운동의 주요 쟁점이 ‘1퍼센트 대 99퍼센트’의 양극화였음을 떠올려 보라.) 이번 선거에서도 도시 유권자의 53퍼센트, 교외 유권자의 71퍼센트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잘못된 미국 경제”를 꼽았다. 새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미국 경제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38퍼센트나 됐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한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경선에서 1천3백만 표를 얻었던 것도 주로 양극화를 문제 삼아 클린턴을 왼쪽에서 비판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샌더스가 자신이 그토록 비판했던 ‘1퍼센트 후보’ 클린턴을 지지하면서, 좌파적 대안 쪽으로 견인될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집할 구심이 사라졌다. ‘밀레니얼 세대’(18~35세)의 다수는 투표도 하지 않았다.

다른 소수는 ‘썩은 통자루’라고 들고 내리치겠다는 심정으로 ‘아웃사이더’를 자처한 트럼프에 투표했다. 이것은 전혀 필연이 아니었다. 트럼프에 투표한 사람의 20퍼센트가 ‘트럼프가 싫지만 그를 찍었다’고 답했다. 기성 정치에 대한 뚜렷한 좌파적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 때는 샌더스 지지가 높았던 오대호 연안 주들(미시건 · 위스콘신 · 인디애나)에서 기성 정치 거부 정서가 트럼프 다득표로 표현된 것이다.

미국인 81퍼센트가 클린턴을 믿을 수 없다고 봤다. 이런 지독한 불신 때문에, 트럼프의 성차별 · 성추행 폭로에도 불구하고 백인 여성 투표자의 53퍼센트, 라틴계 여성 투표자의 26퍼센트가 트럼프를 찍었다. 클린턴은 영부인 시절에는 낙태권 보장과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다가 이제 와서 여성해방의 대변자인 체하니 신뢰가 갈 리 만무했다. 오죽하면 트럼프조차 ‘당신(클린턴)은 지난 30년 동안 무엇을 했냐며 비아냥거릴 정도였다.

트럼프가 경찰의 흑인 살해를 노골적으로 옹호했기 때문에 흑인 여성들은 트럼프를 거의 지지하지 않았다(4퍼센트). 그러나 클린턴도 경찰력 강화를 단호히 옹호했기 때문에 2008년에 오바마를 찍었었던 흑인 여성 1백50만 명이 기권했다. 흑인 전체를 봐도, 35~54세 흑인들의 거의 1백 퍼센트가 오바마에 투표했던 것에 비해 같은 층에서 클린턴 지지는 그보다 많이 낮았다(80퍼센트).

이렇듯 기성 정치의 충실한 대변자 클린턴은 모든 면에서 최악의 후보였다. 그토록 트럼프의 역겨움이 부각됐는데도 ‘클린턴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59퍼센트나 됐던 이유다. (그러나 이들의 다수는 트럼프도 지지하지 않았다.)

배신과 저항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평범한 미국인들의 변화 염원이 좌절된 까닭에, 그리고 그에 대한 좌파적 대안 구축이 실패했던 탓에, 유권자의 75퍼센트가 반대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사기꾼 ‘아웃사이더’ 트럼프의 허황한 공약에 일말의 기대를 건 사람들은 철저히 배신당할 운명이다.

트럼프는 경제 공약으로 소득

세 · 기업세 대폭 감면, 수입품 관세 부과를 통한 ‘일자리 살리기’를 내놓았다. 실현 가능성도 낮지만 설령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 최대 수혜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최상위 부유층일 것이다.

트럼프의 정책대로라면 평범한 미국인들의 소득세가 7퍼센트 감면될 수 있지만, 최상위 부유층은 19퍼센트의 소득 증대 효과를 볼 것이다. 또, 대규모 감세에도 불구하고 균형재정을 유지하려면 지출을 20퍼센트 가까이 삭감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 · 의료 등 복지 예산이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를 것이다.

그렇잖아도 경제 위기가 끝나지 않은 데다 미국 기업의 이윤율이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기동할 여지는 오바마보다도 적다.

이와 동시에, 저항도 분출할 수 있

다. 조짐은 당선 첫날부터 보였다. 트럼프 당선에 분노한 노동자 · 학생 등이 미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동맹 휴업을 벌였고, 뉴욕과 시카고에서는 노동자 · 청년 수만 명이 행진했다. 이들은 11월 13일(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점거하라’ 운동, 노동자 투쟁, 인종차별 반대 운동 등 적잖은 저항이 있었다. 지금 드러나는 분노 정서가 이런 운동과 잘 연결된다면 머지않아 저항이 확대될 여지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좌파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좌파들은 문제의 일부인 민주당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일터와 거리에서 진정한 좌파적 대안을 건설할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 관련 기사 8면

제국주의적 갈등을 악화시킬 트럼프

국내 일각에서는 소수이지만, 트럼프의 ‘고립주의’가 한반도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기대를 품기도 한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각료로 물망에 오르는 인사들을 훑어보기만 해도 이런 기대가 무망함을 알 수 있다.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존 볼튼은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차관을 지냈던 주요 네오콘(1968 운동의 패배를 밟고 1970년대 말에 등장한 새 우익)이고, 대표적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트럼프의 정권 인수를 뒷받침하고 있다. 재무장관 후보

들은 골드만삭스 · 포브스 등 금융 기업 출신 인사들이다.

대외 정책에 관해서라면 트럼프 자신도 “힘을 통한 평화”(레이건 정부의 표현이다)를 말해 왔다. 트럼프는 당선 전부터 중동에 대한 강력한 군사 개입을 공언했으며, 최첨단 미사일방어(MD)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천명했다. 여기에 당선 직후 박근혜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미동맹 강화로 북한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음을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제국주의적 공세를 지속시키고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의 당선은 지배자들도 난처하게 한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한 것은 더 큰 세계적 흐름을 보여 준다고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말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 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6월 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결정이 난 데 이어 이번엔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했다. 이를 보며 좌파는 한 가지 패턴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인물이 인종차별과 여성차별에 찌든 역겨운 부동산 개발업자라는 사실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러나 더 큰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선진 자본주의 가운데 신자유주의 개혁에 가장 앞장선 곳이다. 1979년 영국에서 마거릿 대처가 총리가 되고, 1980년 미국에서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면서 시작된 과정이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려면, 지난 35년 동안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세계화를 앞세운 결과가 누적됐다는 것을 봐야 한다. 얕은 데 얕은 격으로 2007~08년에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불황'이 시작됐다. 그 결과, 정치 체제가 이전만큼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완고한 신자유주의자인 기업 엘리트들이 정치권을 지배했다.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마찬가지였다. 8년 전에 당선한 오바마가 이를 가장 잘 보여 줬다. 그의 당선으로 대중은 실질적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했지만, 그는 기존 지배질서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고 앞선 일의 결과로 가난한 사람들은 갈수록 주류 정치에서 멀어졌다. 그들은 신자유주의 정책과 경기 침체의 희생자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투표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느낀 분노와 비통함은 정치적 폭발력을 가질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는 유세 기간에 자신의 당선은 미국 판 브렉시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출처 David Becker

미국 지배계급의 다수가 원치 않았는데도 트럼프가 당선했다.

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기독교층은 모든 세력을 동원해 유럽 연합(EU) 잔류를 관철하려 했다. 오늘날 EU는 유럽에서 신자유주의를 추진하는 엔진 구실을 맡고 있고, 런던 금융가(시티)는 대처 하에서 변신한 이래 EU 덕분에 융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친EU 대자본들은 투표에서 패배했다. 그래야 마땅했다. 브렉시트 투표에 관한 분석들은 하나같이 가난할수록 탈퇴 투표 성향이 컸다고 지적한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대자본 등 기독교층은 일제히 힐러리 클린턴을 지원했다. 그들이 클린턴에게 열광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트럼프보다는 낫다고 여겼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를 버렸다. 공화당의 역대 대선 후보 가운데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은 밥 돌뿐이다. 그는 운 나쁘게도 1996년 대선에서 빌 클린턴과 맞붙었다 참패한 자다.

브렉시트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대자본의 선택은 나름 합리적이었다.

트럼프는 유세 기간에 자유주의적

국제 자본주의 질서에 어긋나는 연설을 하고 다녔다. 그 질서는 제2차세계대전 이래로 미국 제국주의가 구축해 온 질서이고, 미국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유 무역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질서이다.

트럼프는 각종 무역장벽 완화 조처 때문에 미국의 기초 산업들이 쇠락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의 이런 주장에 대한 호응이 얼마나 컸는지 클린턴은 견해를 뒤집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한다고 말해야 했다. 그리고도 중서부의 옛 제조업 지역들(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미시건, 위스콘신 주)을 트럼프에게 빼앗겼다.

TPP

지금 벌어진 일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질서가 빚은 결과에 반발해 유권자들이 일으킨 두 번째 커다란 반란이다. 방금 필자는 이 반란이 "결과"에 반발하는 것이라고 썼다. 신자유주의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버니 샌더스 열풍을 돌아보면, 끝내 트럼프에 투표한 유권자들에게도 사

회주의를 내세우면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샌더스는 경선에서 민주당 공식 기구 때문에 제대로 기회를 얻지 못했고, 불행히도 경선 패배 후에는 클린턴 지지를 선언했다.

미국 좌파는 이번 선거 재앙을 계기로 민주당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결론 격으로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 첫째,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물론이다. 프랑스 파시스트 지도자 마린 르펜은 트럼프의 승리를 보며 기뻐하고 있다. 내년 봄 프랑스 대선에서 자신도 것처럼 승리할 것이라 기대하면서 말이다.

둘째, 트럼프는 실제로 무엇을 바꿀 것인가? 이걸 말하기가 쉽지 않다. 트럼프는 신자유주의 시기의 금융 투기로 변형한 인물로 그 질서와 결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그가 내세운, 그러나 지킬 수 없는 공약들을 이행하길 바랄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가 이끌 정부에 큰 압박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당선으로 자유

주의적 국제 자본주의 질서에 커다란 균열이 생겼다는 점(올해 들어서만 브렉시트 이후 두 번째다)은 결코 작게 볼 수 없다.

이제껏 미국은 바로 그 국제 질서의 중심에서 위기를 관리하고, 다른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을 조율하는 구실을 맡아 왔다. 그랬던 미국이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게 됐다.

오만하고, 제 기능 못 하고, 갈수록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럽연합이 이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 질문 속에 이미 답이 있다.

더 크게 봤을 때, 미국과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유지돼 온, 정치 체제와 자본의 밀착 관계가 느슨해지고 있다. 대자본은 브렉시트도, 트럼프도 원치 않았고 지금 실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오래가지 않을 공산이 크고, 국가와 자본은 머지 않아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 전까지는 몹시 커다란 불안정성이 생겨날 것이다.

셋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보다 저항에 나서야 한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자가 계승하는 것은 서구 사회 전체에서 인종차별을 강화할 것이다.

영국에서는 '인종차별에 맞서자'(Stand Up to Racism)는 연대체를 키우는 활동을 배가해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더 확대하고 단결시켜야 한다.

트럼프가 당선한 미국에서 흑인, 이주민, 무슬림들은 지금 포위됐다고 느낄 것이다. '흑인들의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등의 운동이 전보다 더 중요해졌다.

그러나 저항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에게선 전략도 필요하다.

트럼프의 당선을 보면, 신자유주의와 경제 위기의 결과들에 맞선 반란이 벌어질 때 우익 포퓰리스트가 거기에 올라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급진좌파는 더 나은 대안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상상력을 발휘하고 또 매진해야 할 대목이다.

▶ 관련 기사 7면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노동자 연대〉는 마르크스주의로 세계를 분석합니다.

- ▶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자 연대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신문
- ▶ 차별과 억압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는 신문
- ▶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논쟁적인 신문
- ▶ 국제적 저항과 운동 소식을 좌파적 관점에서 전하는 신문
- ▶ 저항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신문
- ▶ 독자들이 판매자이자 기고자이고 후원자인 신문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26개 호) 5만 원, 2년(52개 호) 10만 원

신청 : 02-777-2792, 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